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현명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음 1월 19일) 제174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범도민 총 결의대회가 14일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앞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전 대표, 김관영, 이춘석 국회의원, 문동신 군산시장과 14개 전북시장군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및 협력사등 참석한 전북도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군산조선소 준치를 열연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철회하라”

▶ 군산조선소 준치 범도민 총 결의대회

“지역경제 감안 없는 가동 중단 받아들일 수 없어
현대중·정치권·정부차원 적극 대책마련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전북도민이 한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범도민 총 결의대회가 롯데마트 군산점 앞 도로변에서 개최됐다. 군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도민, 도내 각 시·군, 국회의원, 각 정당별 대권주자, 도·시의원, 현대중공업 노조 및 협력사, 도내 기업체, 기관단체, 군산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2만여 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군산조선소 준치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지역 주요 관계자들의 인사말, 결의문 낭독,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및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북도민들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결정은 전북경제를 황폐화 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현대중공업과 정치권,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한 후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보조금 200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입도로 건설, 인근대학 조선학과 신설 등 현대중공업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매출비용만 2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현대중공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6000억원을 넘고 수주한 선박만 20척이 넘는 상황에서 올해 노르웨이로부터 2척의 선박을 수주했다”며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군산에 건조 물량을 우선 배정해 가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대안마련을 호소했다.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인 황숙주

순창군수는 결의문에서 “군산조선소는 도크가 1개뿐으로 도민의 자존감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가동중단민은 멈춰 줄 것”과 “정부차원의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조선소 도크 가동중단을 막고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주요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군산조선소 준치를 공약·이슈화하는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정주영 회장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기를 염원한다”며 “군산조선소가 존치하도록 물량을 배정하고,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 하나의 조선소가 아닌 환서해안 시대를 연 군산의 자존심이다”며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과 전북 경제의 위기이고, 미래의 조선 거점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는 국내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 논리가 아닌 폐쇄에 따른 대량 실직과 협력사 도산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을 쏟고 군산조선소에는 뒷짐을 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도 합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당차원에서 조선소 폐쇄 철회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와 군산상공회의소 등은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지난달 24일 범도민 서명부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전달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정몽준 이사장 자택 앞과 도로변에서 릴레이 1인 피켓시위와 플래카드 시위에 돌입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社 告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7년 2월 16일(목)~2월 17일(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주매일신문
-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접수기간: 2017년 2월 15일까지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안철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찬성”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유력 대선주자로는 지난 12일 전주에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유력 대선주자들이 연이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채용 법제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김승수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14일 전북기자 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지역인재 채용비율 30% 법제화에 찬성한다. 꼭 해야 한다”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법제화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영재 기자



지란스 녹색성장
녹색시업을 농어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녹색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영농 및 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합니다.

농어촌이 향하는 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일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수질 및 환경개선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저지 및 해역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속보〉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도 포함 / 〈속보〉현재, 박측 추가증인 모두 거부

국민의당, ‘전북 뭍 찾기’에 몽니부리기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별도 권역 판단’ 발언에 “소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도내 정치권 “광주전남 변방 전략한 전북 홀로서기에 ‘찬물’ 끼었어” 힐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호남에서의 전북 별도 권역 판단’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소지역이기주의’로 몰아 붙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올해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전북 뭍 찾기’와도 연결고리가 있어 국민의당이 과연 전북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는 의구심도 든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내 정치권 안팎에서도 국민의당이 문 전 대표의 ‘전북독자권역 설정’ 발언을 두고 그동안 광주전남의 변방으로 전략한 전북의 홀로서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4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유성엽 의원의 ‘소지역이기주의’ 발언은 전북 뭍을 찾는 우리들 문제를 대권후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당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회견을 방불한 자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호남에서의 전북 별도 권역 판단’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전·남북의 분열과 ‘소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걸 보니, 국민의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니 다급해지긴 한 모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대표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전북을 별도 권역이라 말해서 전·남북을 갈라놓고 광주를 불편하게 해서 얻을게 하나도 없다”면서 “오히려 문 대표는 전북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 대변인실은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소지역주의’는 호남 전체의 뭍에서 전북뭍을 키워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우리들 뭍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나온 억측에 불과하다”며

“이는 국민의당이 분열적 뻔뻔정치로 전남과 광주에서 문재인후보의 지지도를 깎아내리려는 필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지원 대표의 이번 발언은 각각의 특색을 갖춘 지자체가 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을 하도록 앞장서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명제를 구시대적 발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북 뭍 찾기는 대명제 앞에 도민 전체가 범도민적 운동 전개와 공감대 확산을 통해 우리 지역의 차별을 정상화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 국민의당은 엉뚱한 논리로 전북의 노력에 대한 성과의 본질을 흐리자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의 지역소멸방언이 체 사라지기 전에 소지역주의발언 등 전북 정서와 맞지않는 일련의 발언으로 전북도민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용 기자